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환경마크협회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전 화 : 02-358-6800 (교환133)  
 ◆ 팩 스 : 02-358-8561  
 ◆ 이메일 : tomasyoon@kel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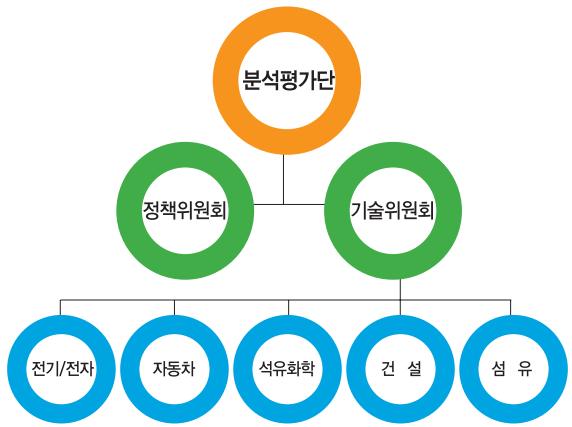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상기 환경마크협회내 TEN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TEN사무국에서는 해외환경규제 온라인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4월 한달간 시범운용을 거쳐 5월부터 해외환경규제동향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 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의 환경규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운영에는 환경마크협회·KOTRA·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Calendar

2005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①	5
6	7 ②	8 ③~⑤	9 ⑥	10	11	12
13 ⑦	14	15	16 ⑧⑨	17	18	19
20	21	22	23	24 ⑩	25 ⑪	26
27	28	29	30	31		

2005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⑫	7	8	9
10	11	12	13 ⑬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⑭	29	30

## 관련 국제회의 정보

- ① 3.4 교토의정서 발효와 향후 기후변화정책 (일본 교토)
- ② 3.7~14 TEN 유럽 환경규제대응 현지시찰 (영국 런던)
- ③ 3.8~11 환경기술 및 서비스 국제무역 전시회 (독일 라이프치히)
- ④ 3.8~10 청정공기 기술 및 전략회의 (미국 볼티모어)
- ⑤ 3.8~10 국제 대체연료 2005 포럼 및 전시회 (독일 베를린)
- ⑥ 3.9~11 제5차 국제 자동차 리사이클링회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⑦ 3.13~19 제9차 카이로 에너지/환경국제컨퍼런스 (이집트 카이로)
- ⑧ 3.16~17 제12차 유럽포장법회의 (벨기에 브뤼셀)
- ⑨ 3.16~18 ENEX - New Energy2005 (폴란드 페어그룬트)
- ⑩ 3.24 UN 아태 환경과개발 장관회의 (한국 서울)
- ⑪ 3.25~9.25 일본 지구사랑 국제박람회 (일본 도쿄)
- ⑫ 4.6~7 제6차 EFP&RCPT Trade Show (미국 몬타리온)
- ⑬ 4.13~15 OECD 환경정책이사회 (프랑스 파리)
- ⑭ 4.28~30 3R 컨퍼런스 (일본 도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해외 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 “전세계 수은 사용 줄인다”

- EU집행위, 수은의 역외 수출 제한하는 수은정책안 발표 -

**치** 과용 아말감, 배터리, 형광등, 온도계 등 측정장치에 널리 사용되는 수은은 인간활동에 의해 공기, 물 또는 식물체를 통하여 이동하면, 보다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로 변할수 있다. 수은은 주로 석탄연소와 같은 자연자원내 함유된 수은의 방출, 온도계 등 제품에서의 수은사용과 금광과 같은 공정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심각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섭취시 생명에 치명적이며, 소량의 수은으로도 신경계통에 심각한 해를 가져온다.

이에 최근 유럽에서는 수은의 사용 및 배출 감소를 위한 법규를 제정해 왔으나 여전히 수은으로 중독된 생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유럽 지중해 국가를 중심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정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EU 집행위는 수은의 역외수출 제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용으로 한 수은 정책안을 발표했다.

EU집행위는 “EU역내의 수은제품 수요를 줄이는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며, 나아가 수은의 세계적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EU는 현재 수은의 최대 수출지역으로서 전세계 수은 거래를 감소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U는 매년 전세계 총3,600톤의 수은공급 중 1천톤을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그밖

의 수출국은 키르기스스탄, 알제리, 중국 등이다.

EU는 이 수은제한정책을 국제적인 수은규제정책과 연계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정유해화학물질 교역에 있어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장거리 월경오염원에 대한 UNECE협약'의 중금속의정서, UNEP의 수은프로그램, UNDP/GEF/UNIDO 글로벌 수은계획 등과 공조기로 했다. 특히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와 같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오존층파괴물질과 비슷한 수준의 수은규제도 고려하고 있어서, 향후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수은을 사용하는 배터리, 시멘트, 철강, 전력, 폐기물 및 농약(살충제) 산업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영국은 화장터로부터  
▶ 관련내용 2면

### EU 수은정책안의 주요 내용

- ◆ 2011년까지 수은수출 금지
- ◆ **국제적**: 금광과 같은 활동에 있어서의 사용, 배출과 수은 교역을 통제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
- ◆ **수요 감소**: 온도계 등 수은함유 측정장비 시장의 제한과 치과용 아말감 등 기타 사용처의 추가 조사
- ◆ **과잉 조절**: 산업계에 의해 사용 중지된 수은의 안전한 저장과 아직 사용중인 구 제품과 같이 이미 역내에서 순환 중인 수은의 추가 연구
- ◆ **배출 감소**: 기존 EU법의 효과 검토
- ◆ **노출에 대한 보호**: 어린이 및 임산부에 대한 식품상의 노출에 대한 추가 연구와 식품에서의 수은에 대한 추가 권고 규정
- ◆ **이해 증진**: 수은에 대한 추가 연구

VOL. 07  
2005. 03. 02

헤드라인	1
◆ EU, 수은정책안 발표	
해외동향	2
◆ 목재표장제 규제 강화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강행 가능성 제기	
◆ EU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정책	
◆ 일본,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발빠른 행보	
◆ EU 전자파적합성지침 개정	
◆ 미국,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 확산	
◆ 일본, '요람에서 요람까지' 에코디자인	
◆ 유럽, 섬유환경라벨에 대한 관심 고조	
전문가 리포트	6
◆ 다국적 기업이 보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새 간행물	6
◆ EU회원국 WEEE/RoHS 이행현황 보고서	
주요단신	7
◆ 세계 철강산업의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	
◆ EU PPW지침, 신가입국에 적용유예	
◆ 독일 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 장착 디젤차에 자동차세 우대	
◆ 독일 비도료차량 배출가스 기준 강화	
◆ 덴마크 페인트업계 환경호르몬 사용 제한 움직임	
◆ 영국, 신차에 온실가스배출 등급표시	
◆ 화학기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약속	
◆ 중국 에너지효율표지 강제시행	
◆ 미 EPA 청정디젤엔진 신기술 시험	
관련 국제회의의 정보	8

## 목재 포장재 규제 까다로워진다

- EU, 3월 1일부터 국제기준에 따른 규제, 각국별 규제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

**3월** 1일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EU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강제되는 새로운 조치가 발효됐다. 수출입 화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경로가 될 수 있어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역 과정에서 자국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목재포장재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까지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고 있다.

이번 EU의 규제조치는 목재포장재에 관한 기존 EU 지침(2000/29/EC)을 개정한 것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검역조치표준(ISPM) No.15에 따른 것이다. ISPM No.15는 2002년 채택된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으로 세계 각국은 이 검역기준에 따르는 수입요건을 채택중이다.

신지침은 2005년 3월 1일부터 목재포장재(예컨대 각종 포장상자 및 용기, 유사포장, 화물용 깔판, 운반기구, 적재판

등) 적용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역내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6mm이하의 원목, 접착·고열·압축으로 가공한 목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00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작 및 수리, 재사용한 목재 포장재는 2007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국 소독처리 조건을 확인하여 허용되는 포장재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미 열처리 및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처리한 목재포장재도 병해충의 재감염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목재포장재의 개발 및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EIAtrack 등]

□ 국제기준 ISPM No.15에 따른 각국별 규제시기

국 가	규제시기	국 가	규제시기
캐나다	2005년 9월 16일	E U	2005년 3월 1일
미 국	2005년 9월 16일	스위스	2004년 7월 1일
호 주	2004년 9월 1일	중 국	2006년 1월 1일
한 국	2005년 6월 1일	일 본	구체적 계획 없음



## EU집행위, 올해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강행가능성' 내비쳐

**얼** 마전 유럽의회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EU집행위는 현재의 회에 상정한 REACH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집행위의 노력을 강조하고, 유럽산업, 특히 유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보건과 환경의 증진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 디마스 환경장관은 "이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생산한 화학물질에 대한 필수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 라면서, "유럽 시민들은 화학분

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건과 환경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위는 현재 유럽 중소기업을 위한 지침서를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오존파괴물질인 CFC를 전폐한 것처럼 유해화학물질대 대체물질을 통해 전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마스 장관은 "현 REACH 법안은 이미 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정한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업계의 이행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의회가 특별히 수정요구를 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강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출처: EU Commission]

▶ 1면에 이어

발생하는 수은을 줄이는 가이드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영국내 수은배출의 10%가 화장으로 인한 치과용 아말감인 그 원인으로, 이에 따라 2012년까지 모든 화장터에 수은발생 저감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이 이러한 수은발생을 규제해 오고 있어서 앞으로 소량의 수은발생까지도 억제하는 경향이 유럽 전역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의 배출제한에 관한 UN 중금속의 정서 (UN Protocol on Heavy Metals) 당사국으로서 수은을 1990년도 수준 이하로 줄여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나이로비에서 열린 UNEP 집행이사회에서 미국의 반대로 수은규제협약 제정이 무산된 바 있어, 수은규제는 더욱 더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EU Commission, UK DEFRA 등]



## EU, 2012년 이후 기후변화정책은 ‘주요 배출국 위주로’

**2월** 9일 EU집행위는 2008~2012년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가 만료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규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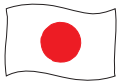
그 기본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및 인도 등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에 해당하는 이들 최대배출국을 기후변화 토론장에 끌어들여 국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올 한해 ‘공동이나 차별적인 책임원칙’에 근거하여 이들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부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대상의 확대이다. 2012년 이후에는 항공산업, 해운



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축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더욱이 열거한 산업은 예시에 지나지 않는 의과정에서 사실상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식하에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올 한해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연말쯤 보다 구체적인 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IEA가 발표한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4’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하여 영국에 이어 세계 9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EU 등 선진국가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요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EU Commission]



## 일본정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발빠른 행보

- 발효맞춰 국별등록부 시스템 가동, 개도국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 -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월 16일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크레디트(credit)의 보유, 이전을 관리하는 ‘국별등록부’(registry) 시스템 운용을 개시했다. 국별등록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발행, 보유, 이전, 획득, 취소, 이월 등의 관리를 위한 기록부다.

교토 메커니즘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각국의 국별등록부나 청정개발메커니즘(CDM)이사회가 관리하는 CDM등록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관리하는 거래로그(ITL) 등 관련 기록은 웹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게 된다.

일본은 등록부의 이용방법 등을 정한 ‘국별등록부 이용규정’을 고시하고 사용설명서도 공개했다. 향후 민간기업이 교토의정서상의 크레디트에 관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국별등록부 관리자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에 신청을 통해 국별등록부 시스템에 반영된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CDM/JI(공동이행) 프로젝트 호스트국(수입국)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정부관계자와 민간기관 대표 등을 초청, 오는 3월 24일 ‘교토메카니즘 - Japan Carbon Investors Forum’을 개최한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 7개국과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3개

국,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5개국 등 15개국 관계자를 초청하여 초청국별로 교토메카니즘 관련 정책과 유망한 사업 및 집행체제를 설명하는 이번 포럼은 CDM/JI 사업국을 조기에 확보하므로써 안정된 크레디트 확보를 목적으로 한 CDM/JI 사업 설명회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지난 1월 3건의 CDM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총 15건의 CDM/JI 사업이 시행 중이다.

한편 일본환경신문은 일본정부가 별도의 ‘탄소기금’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교토메카니즘 활용 촉진을 위해 배출권 취득을 위한 ‘탄소기금’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는 경제산업성 등이 출자하여 CDM 이나 JI 등 주로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는 동시에 배출권을 직접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러한 차별한 대응은 자칫 CDM/JI 사업 시장의 독식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출처: 일본 환경성, 경제산업성, 환경신문 등]

## EU 전자파적합성(EMC) 지침, 뉴어프로치 지침으로 개정

- 불필요한 적합성 평가 절차 폐지로 제조업자 부담 감소 -

**EU**의 전자파적합성(EMC) 지침이 뉴어프로치(New Approach) 지침으로 개정됐다.

EMC지침이란 전자 방해파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그 기능이 전자 방해파에 의해 장애를 받는 우려가 있는 기기에 대하여 과도하게 전자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EMI), 동시에 전자적인 영향에 대해서 내성(EMS)을 일정 수준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MC지침(89/336/EEC)은 1996년 시행된 이래 9년이 경과되면서, 시행초 전자부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을 지침의 대상으로 하므로써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 지침의 하나가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로 인해 EU집행위는 1997년에 EMC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지침의 개정안을 검토한 이후 다양한 안을 받아들여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정식 공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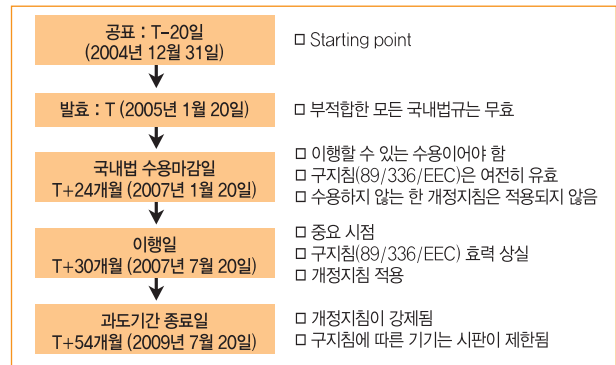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침 방식을 탈피하여 지침상에 오직 필수조건만을 규정하면서 기술적 세부사항은 표준(Standard)에 위임하는 뉴어프로치로 바뀐 것. 이에 따라 규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으나, 검사기관이 제출해야 할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서류가 늘고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해졌다. 새 지침은 제조업자에게 제조업체(수입업체) 명칭 및 주소 등의 표시, 제품의 명확한 구별(형태, 제품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 관리수단을 검사기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는 시장감시당국으로 하여금 제품의 추적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반면 개정지침은 생산자에 대해 독립적 검사 및 증명기관의 강제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던 불필요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폐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비용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과 'CE' 마크의 부착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한편 뉴어프로치 지침으로 바뀐에 따라 지침의 개정없이 표준(Standard)을 정기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EU Commission]

### EMC 개정지침의 향후 적용일정



## 미국가전시장, 에코디자인(Eco-Design) 확산

**미**국 가전시장에 친환경 제품 설계, 즉 에코디자인(Eco-design)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내 폐기처분되는 가전제품 및 IT제품의 양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 연방 및 주 정부가 이러한 제품의 폐기와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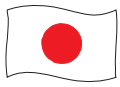
현재 미국내 매립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은 전체 쓰레기 매립량의 4%에 불과하나, 전체 매립쓰레기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70%가 폐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전자 폐기물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부터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을 시행하는 등 연방 및 주정부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폐기물 관련법과 친환경제품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가전업계는 그 대안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로 눈을 돌렸다.

예컨대 HP의 경우 수년간 5천톤 규모의 자사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으나, 기존 폐기물의 재활용이 어려운 점 때문에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Dell 사는 제품의 외부를 친환경 페인트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 제품 디자이너들은 제품 생산시 사용되는 접착제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감안해, 제품 디자인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나사 사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같은 타입의 나사를 사용토록 하여 쉽고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최근 미국 내 기업들도 에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유럽성향으로 옮겨가고 있음이 관측되고 있다. [제공: KOITRA LA무역권]



## 일본, '요람에서 요람까지' 순환형 제품설계 요구 강화

- 4월 '3R 관련 G8 선진각료회의' 개최 등으로 주도 -

**일** 본의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일본이 추진해온 3R (Reduce, Reuse, Recycle) 제도는 사실상 전세계 최고수준의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놀라운 만큼의 자원유효활용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장의 세계화, 공급망의 다국화, 제품판매의 글로벌화로 인해 일본내에서의 3R로는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에 한계가 있음을 최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올 초 제품 3R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일본은 '선진국간 순환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4월 29일 G8 국가를 중심으로 한 '3R 이니셔티브 각료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지난해 6월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제안한 것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3R행동계획'을 근거로 하여 폐기물 발생의 억제, 자원 및 제품의 재사용, 재생이용은 물론, 현 무역체제하에서의 재생이용, 재생산을 위한 물품 및 원료 뿐만 아니라 청정기술의 국제적인 유통에 대한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제품 3R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회수 및 리사이클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제조시에도 폐기시 재사용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설계 정보'의 활용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친환경 정보를 공

개하는 것과 순환형 설계 제품의 보급촉진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회의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였으며, GPN, 일본전기공업협회(JEMA) 등에서 실시중인 기존의 유해물질 정보관리체계 8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있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표시제는 소비자의 구매촉진과 재활용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여 일본산업표준(JIS) 제정을 통해 내년(2006년) 중순경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정보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EU의 RoHS지침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6대 금지유해물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그 외의 물질까지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R과 관련한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제품의 순환형 설계를 통한 자원의 국제적인 순환과 '폐기없는 무한 재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3R 관련 폐기물 및 원료, 기술의 저관세 국제교역을 원활히 확보하면서 일본의 순환형설계 제품의 시장형성을 통한 장벽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출처 : 일본 환경성, 경제산업성

## 유럽, 섬유환경라벨(Öko-Tex)에 대한 관심 증가

**을** 해 1월 1일부터 섬유에 대한 쿼터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국 섬유제품의 EU, 미국 등에 대한 수입증가가 예상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월에만 전년 대비 섬유품목별로 100% 이상씩 중국섬유의 대EU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럽 섬유환경라벨인 Öko-Tex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Öko-Tex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섬유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정한 규격으로, 의류나 home textile 생산과정에서 환경 및 보건에 악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환경표준(Standard)이다.

특히 이 라벨은 EU의 환경마크와 같이 소비자 및 환경보

호측면에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면서 유럽시장 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4,200기업 3만여 섬유제품이 이 라벨의 인증을 받았다.

한편 중국 섬유제품의 유럽시장에의 파급효과가 문제됨에 따라 향후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한국산 섬유제품이 이들 중국, 인도, 파키스탄산 저가 제품과 직접 경쟁하기 힘든 현실에서 대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마크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제품으로 다가서는 것이 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공: KOIRA 브뤼셀 무역관]



## 다국적 기업이 보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환경마크협회 TEN사무국  
윤덕찬 연구원

**해** 외의 환경규제 문제는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그동안 환경선진국이라 불리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 중국의 전기·전자 및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며, 높은 기준으로 인한 장벽이기 보다는 새로운 절차와 제도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로 기업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TV, 냉장고, 세탁기를 각각 4억대, 1억3천만대, 7억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사용연수를 감안할 때 2010년부터 매년 각각 5백만대씩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버려지지않아 PC 및 휴대전화의 폐기물도 상당한 양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 중국 당국은 관련 환경법 정비에 나서 순환형 경제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청결생산촉진법’을 비롯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등을 제·개정하였으며, 중국 관 WEEE/RoHS 제정에 따라 많은 제도가 설립 및 변경되고 있는 점은 이미 본지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다방면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바, 기업 본사의 지시에 따라 ISO14001을 취득하거나 전문위원회 및 조직 담당부문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환경관련 표준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까지 설치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서의 환경에 대한 교육도 입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거나, 환경전문가 교육, 패널에 의한 전시 등 다양한 내부조치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 이미 본사차원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정해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 각 지역에서의 공장에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까지 부품의 90%를 일본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다만 최근 품질 수준이 낮았던 중국제 부품들이 급속히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현지조달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국에 설립한 수출전용공장에서 생산된 중국생산차량을 유럽으로 바로 수출하기 위해 유로 IV 수준까지 향상할 예정이다.

한편 다국적 전기전자회사의 경우도 부품의 현지조달율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와는 달리

당분간 현지조달율을 높일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중국관 RoHS 대응 보다는 유럽수출을 고려하여 공급업체의 유해물질 무함유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사내에 함유 화학물질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확인된 중국기업에 한하여 공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청결생산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하여 이미 진출한 선진기업들은 폐수를 처리시설에 의해 90% 리사이클하므로써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발전기, 도장의 배기 등에 대한 처리시설, 소음대책, 위험물관리대책 등도 실시하고 있어 중국환경법 강화가 오히려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 전력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제품의 요구나 RoHS 대응차원의 부품 및 소재, 환경보호관련 장비 등의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다국적 선진기업의 입장에서 오히려 시장진출 및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어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은 유럽에서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 새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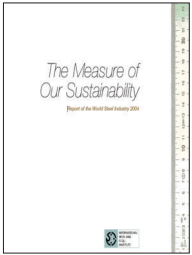
## 영국 DTI의 ‘EU 회원국별 WEEE/RoHS 이행현황 보고서’



**영**국 무역산업부가 EU 회원국별 WEEE/RoHS의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 ‘Transposition of the WEEE and RoHS Directive in other EU Member States’를 발간했다.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각국별 시

스템을 도표를 통해 비교하는 한편, 회원국별로 관련 법규의 내용, 시스템 운영,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의 의무, 시스템관련기관 등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 영국 DTI]

**세계 철강산업의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국제철강협회(IISI)가 세계 철강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POSCO 등 세계 5대 철강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42개 철강회사를 총 망라하고 있으며, 11개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자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출처 : IISI]

**EU 포장폐기물 개정지침, 신가입국에 적용 유예**

EU이사회는 지난해 개정한 포장폐기물 지침상의 재생 및 재활용 기한을 EU 신가입 10개국의 요청에 따라 국가별로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적용을 유예키로 확정했다. [출처 : EU Commission]

**독일 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 장착 디젤차에 자동차세 우대**

지난 2월 2일 독일 환경장관과 재무장관은 EU 지침상의 기준(입자상오염물질 배출량 5mg/km)을 충족하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디젤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년간 감액해 주는 우대조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해당 차량을 구입하거나 DPF를 장착하는 차량은 250~350 유로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독일정부는 자동차업계와의 합의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DPF를 부착하지 않은 디젤차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출처 : 독일 BMU]

**독일 비도로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

독일 정부는 비도로(Off-road) 차량의 PM 및 NOx 배출기준을 강화한 새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2005~2014년에 걸쳐 적용되는 이 강화기준은 EU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상차량은 주로 트랙터, 건설차량, 산림차량

지게차, 기관차 등이다. 독일환경부는 이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2015년까지 현 수준의 1/2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독일 BMU]

**덴마크 페인트업계, 환경호르몬 사용 금지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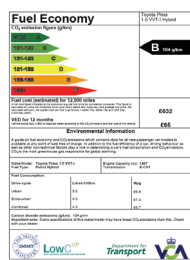
덴마크 환경보호청(EPA)은 덴마크 페인트업계에 APE(알킬페놀에폭시레이트)등 환경호르몬 성분이 있는 페인트 사용 자체를 요청했다.

APE는 도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이 물질이 환경중에서 분해되면 노닐페놀(Nonylphenol)과 같은 환경호르몬 물질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Beck&Jorgensen 등 덴마크 페인트생산업체는 APE 대신 영향이 적은 알킬설페이트(Alkylsulphate)와 같은 다른 물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덴마크 EPA는 업계의 자발적 APE사용자제 요청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대체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를 거쳐 APE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영국, 신차에 온실가스배출 등급 표시**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앞장서 온 영국은 2006년형 차량부터 CO2 배출 등급표시를 부착한다. 이 제도는 영국에 진출해 있는 42개 자동차회사들의 자발적 라벨링 협약으로, 2003년 영국정부가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저탄소차량파트너십'(LowCVF)에서 시행하는 표시제도이다. [출처 : LOWCVF]

**화학기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약속**

세계 주요화학기업이 환경을 위하여 제품 포장 및 용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폴리머의 사용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2월 14일 독일 BASF, 미국 Cargill Dow, 이태리 Novamont, 네덜란드 Rodenburg Biopolymer 등 4개 기업은 EU집행위와 이 같은 내용의 자발적 협약에 합의했다. 이들 4개 기업은 전세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나 관리프로그램이 없는 이 부문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EU Commission]

**중국 에너지효율표지 강제시행**

중국은 지난해 공포한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가정용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에너지효율표지 부착이 강제된다. [출처 : CECP]

**美 EPA, 포드사와 청정디젤엔진 신기술 시험 실시**

미 EPA는 지난 달 포드사와 함께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이면서 연료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청정디젤엔진 신기술 상용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EPA는 이 기술을 연비, 비용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EPA가 특허권을 갖는 '청정디젤연소'(CDC)라는 이 기술은 연소과정에서 NOx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디젤연소프로세스 기술로서, 이번 시험에서 CDC기술이 탑재된 포드사의 갤럭시 미니밴을 통해 EPA의 NOx 배출기준인 1마일당 0.07그램(Tier II Bin 5)을 충족하면서 기존 미니밴에 비해 연비가 30~40%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로서 EPA는 높은 수준의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 승용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美EPA]